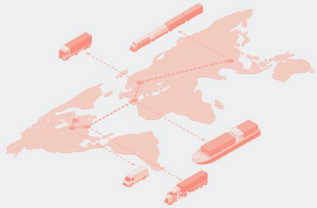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24-056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목 차

제1장 미국 대선 결과와 시사점
제1절 대통령, 의회, 주지사 선거 결과 6
제2절 선거 결과 의미 및 시사점 10

제2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제1절 인선 전망 11
제2절 경제정책 전망 15
제3절 통상정책 전망 19

제3장 우리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제1절 정책 방향 요약 24
제2절 우리 무역·투자에의 영향 2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요 약

1. 2024년 美 대통령 선거 및 의회 선거 결과

☐ **(결과) 2024년 제47대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 주요 경합지인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 승리함으로써 대선 선거인단 총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에 사실상 성공 예상 (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 ('25.1.6.)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인단 개표 확정 ▸ ('25.1.20.) 대통령 취임식

☐ **(의회) 제119대 연방의회 선거 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확보**

*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이상을 차지하여 다수당 확정, 하원은 기존 민주당 지역구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등 다수당 확보가 유력(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 **(주지사) 11개 주와 2개 미국령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6석 확보, 2석 추가 확보 유력으로 우위 전망**

☐ **(평가) 미 경제 및 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영향력 재확인**

○ 바이든 행정부 정책 기조로부터 전환, 트럼프 1기 정책 재추진 및 강화 전망

○ 미국 우선주의 경제·무역 기조 및 미국 중심 안보 정책 강화 전망

2.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방향 전망

☐ **(인선) 차기 정부 인선 기조는 보수파, 검증된 친트럼프 충성파(Loyalty) 기용**

○ 원만한 정권 이양·정책 추진 강화를 위해 트럼프 1기 인사 대거 발탁 전망

- 트럼프의 정책의제 수행을 위해 충성도가 높은 인사 우선 기용 예상
- 1기 행정부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이고 원만한 정권 이양 도모

☐ **(경제) 경제 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추구**

○ (세제) 개인과 기업 감세,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와 경제 성장 촉진

요 약 (계속)

□ **(통상) 보호무역주의 및 對중국 견제 강화**

○ **미국 우선주의, 對中 전략적 디커플링, 미국 내 제조업 강화에 중점**

- (관세)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고율 관세 부과 및 對중국 무역 제재 확대
- (중국) 對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제재 강화
- (공급망) 미국 내 제조업 및 핵심 산업 공급망 강화
- (무역협정) 양자 무역 협상 선호 및 다자 무역협정 재검토

3. 우리 무역 ·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 **(기회요인) 제조업 육성책, AI 활황 등으로 첨단산업, 에너지 기자재 유력 전망**

○ **(제조업)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 증설 전망**

- (반도체) 미국 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R&D 지원으로 시장 기회 확대
- (기계·장비) 인프라 개발 및 리쇼어링 정책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
- (화석연료 인프라) 원유 시추용 플랜트, 부품, 원자재 등 수요 증가

○ **(AI 활황) 최근 데이터센터 급증세에 따른 인프라 수요 확대 예상**

- (원자력) 원전(SMR 등) 개발 관련 시설, 기자재 수요 증가
-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 부품 등 전력 인프라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 **(대체시장) 중국산 대체효과에 따른 시장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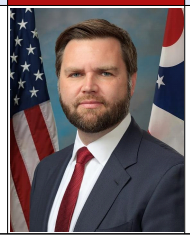
- (자동차) 고율 관세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공급 감소
- (바이오) 생물보안법 등에 따른 중국 기업의 미국 바이오 시장 내 입지 축소 전망

□ **(리스크요인) 외국기업 대상 진입 장벽 강화 유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보 주력**

Ⅰ 미국 대선 결과와 시사점

1 대통령, 의회, 주지사 선거 결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J. Trump)	부통령	JD 밴스 (JD Vance)
	<생년월일> 1946년 6월 14일생 (78세) <경력> The Trump Organization 회장. 제45대 미 대통령(2017-2021) <학력> 펜실베이니아 대학 학사(경제)		<생년월일> 1984년 8월 2일생 (40세) <경력> 미 해병대 제대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학력> 예일대 박사(법학)

1. 대통령 선거

□ **2024년 제47대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 당선 확정**

○ **트럼프 후보가 대선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총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 해리스 부통령에 사실상 승리 예상**
(미 동부 시간 11.5. 오전 3시 기준)

* 선거인단은 각 주의 유권자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대부분 승자독식 방식을 채택,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 확보 시 당선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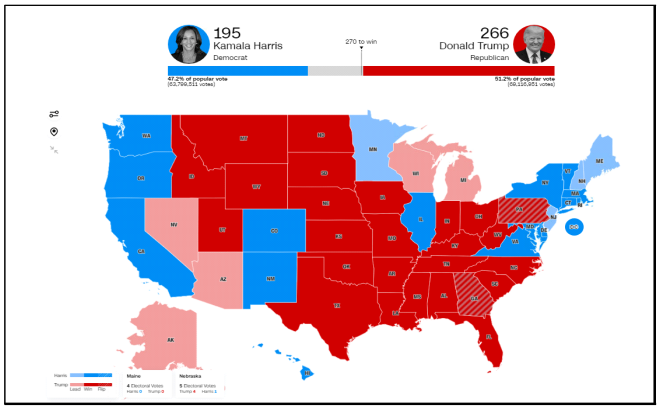
○ 트럼프 후보는 26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 승리(미 동부 시간 11.5. 오전 3시 기준)

* 주요 경합주 선거인단(수): 애리조나(11), 위스콘신(10), 펜실베이니아(19), 조지아(16), 네바다(6), 미시간(15)

* 네바다(트럼프 51.4%, 해리스 46.9%), 애리조나(트럼프 50.5%, 해리스 48.6%), 등 개표중인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미 동부 시간 11.5. 오전 3시 기준)

○ 대선 직전까지 해리스 후보와 치열한 접전 끝에 주요 경합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24년 대통령 선거인단 확보 결과 >



[자료: CNN, (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 (평가) 트럼프 후보, 초박빙 경합주에서 승리가 결정적 역할

○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승리, 선거인단 과반수 확보 유력 전망

○ 견고한 트럼프 지지층의 결집, 보수 진영, 백인 남성·노동자, 라틴계 및 젊은 흑인 유권자들과 교외 지역의 지지율 상승이 당선에 크게 기여

* Pew Research Center[1]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트럼프 지지 유권자 중 94%가 '24년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할 것으로 조사

○ 트럼프 후보는 보편 관세, 강력한 국경 보안, 범죄 및 이민 정책 강화 등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 획득에 성공

○ 트럼프 후보 승리는 미국 내 정치적 양극화 심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부동 지지층과 정치적 영향력 재입증

* 그로버 클리브랜드(Grover Cleveland, 제22대, 제24대) 대통령에 이어 미 역사상 두 번째로 비연속(제45대, 제47대) 임기 대통령이 되는 역사적인 복귀를 의미

1) https://www.pewresearch.org/politics/2024/10/10/the-harris-trump-matchup/

□ (향후일정)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상·하원 합동회의 등을 통해 내년 1월 20일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

○ **'25년 1월 20일(수) 정오 연방의회에서 거행되는 대통령 취임 선서와 동시에 47대 미국 대통령 임기 개시**

연도	날 짜	일 정
2024	12.11.	주별 선거인단 명부 확정
	12.17.	대통령 선거인단(Elector) 투표
2025	1.3.	119대 의회 개원
	1.6.	상·하원 합동회의, 선거인단 투표 집계 및 결과 발표
	1.20 .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자료: 미국 의회조사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 연방 의회 선거

□ (상원) 대선과 동시 진행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확보

○ **제118대 의회 상원은 전체 100석 중 민주당 51석, 공화당이 49석으로 민주당이 다수당 차지, 제119대 의회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원 다수당 확보 유력** (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 (하원) 공화당이 기존 민주당 지역구에서 승리하는 등 다수당 확보가 유력한 상황 (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 435석 전체 선거에서 초박빙 구도 속 공화당이 소폭 우세 구도 유지

□ 공화당이 상·하원 의회를 모두 차지함에 따라 의회 입법에 영향 전망

○ 공화당이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 주도권을 가지게 됨에 따라, 차기 행정부와의 주요 정책 조율과 입법 활동에 유리한 입지 확보

– 공화당의 다수당 확보로 상원의 고유 권한인 대법관 임명, 행정부 고위 인사 인준, 조약 비준 등에서 영향력 행사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

3. 주지사 선거

□ **(주지사) 총 11개 주와 2개 미국령(푸에트리코, 미국령 사모아)에서 선거 실시**

○ 기존 주지사의 소속 정당 분포는 공화당(27), 민주당(23)으로 공화당 우세

○ 미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공화당 6명, 민주당 3명으로 전체 50명 주지사 중 공화당 소속 25명, 민주당 소속 23명 차지로 공화당 우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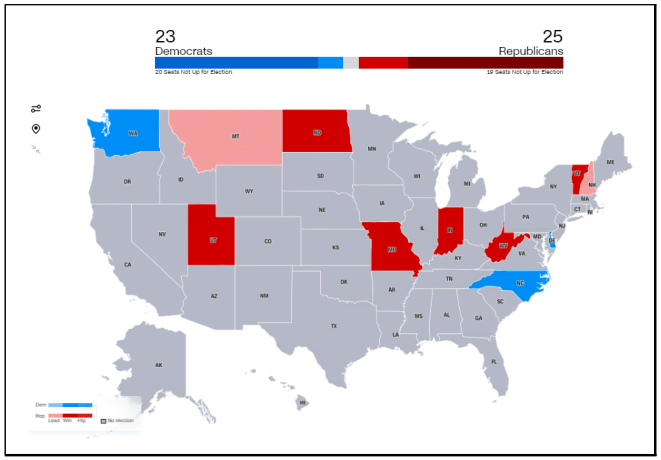
* 개표중인 뉴햄프셔(공화당 52.8%, 민주당 45.2%), 몬테나(공화당 58.1%, 민주당 39.7%)에서도 공화당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11개 주지사 당선 정당:

인디애나(공)*, 미주리(공)*, 뉴햄프셔(공), 노스다코타(공)*, 유타(공)*, 버몬트(공)*, 웨스트버지니아(공)*, 몬테나(공), 워싱턴(민)*, 델라웨어(민), 노스캐롤라이나(민)*

* 당선 확정(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 주지사 선거 진행 현황 >



[자료: CNN, (美 동부시간 11.5일 03시 기준)]

2 선거 결과 의미 및 시사점

□ **미 경제·글로벌 안보 위기 속에서 트럼프 후보의 정치 영향력 재확인**

○ 트럼프 후보 암살 시도, 바이든 대선후보 사퇴, 유례없는 초박빙 대결에서 트럼프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

– 트럼프 후보는 경제, 불법 이민, 인플레이션, 범죄 문제 공약과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문제를 바이든 정부의 실패로 부각, 경합주 표심 획득에 성공*

* 유권자들은 △경제(47%), △인플레이션(39%), △이민(27%), △의료정책(26%)을 주요의제로 인식, 특히 경제가 대선의 큰 관심사로 부각

–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을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만들기 위한 정책 중요성 강조

□ **기존 트럼프 1기 정책을 재추진하면서 강화할 것으로 전망**

○ 기존 바이든 행정부와는 에너지, 이민, 무역 정책 등에서 상반된 방향으로 미국 정치의 양극화 현상 심화 예상

○ 취임 이후 에너지 규제 완화, 이민 제한 강화, 무역협정 재협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전망

□ **미국 우선주의 경제·무역 기조 및 미국 중심 안보 정책 강화 전망**

○ 트럼프의 재집권으로 무역 규제 강화, 전통에너지 및 제조업 육성, 국경 보안 강화 등 미국 중심 경제 안보 정책 강화 예상

– 특히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 추구, 무역 및 기술 경쟁, 자국 산업 역량 강화 및 국가안보를 위한 정책 강화 전망

– 기존 무역 협상 재검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구조의 재조정 예상

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 전망

1 인선 전망

1. 기조

□ **차기 정부 인선 기조는 보수파, 검증된 친 트럼프 충성파(Loyalty) 발탁에 중점**

○ 트럼프는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이사회 의장인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을 공식 대통령직 인수팀(Transition Team)*을 이끌 공동 책임자로 임명

> * **Trump 2.0 인수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털시 개버드 하원 의원, 러닝메이트인 JD 밴스를 포함한 친구와 가족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 캔터 피츠제럴드의 CEO인 하워드 루트닉과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이끌었던 린다 맥마흔이 공동 의장

○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충성도(Loyalty)가 높은 인물을 우선 기용할 전망**

* 트럼프는 전임 공화당 각료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례적인 상황[2]에 처해 있음.

- 특히, 국가안보, 경제 정책, 이민 분야에서 '미국 우선주의' 아젠다를 강화할 수 있는 정계 및 외부 인사들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

-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하고 미국 우선 정책의 핵심인 무역 정책을 집행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가 트럼프 2기 USTR 인선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Politico, 2024.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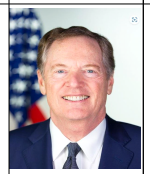
* 라이트하이저는 재무부·상무부 장관 또는 백악관 수석경제고문 등으로 거론되고 있음

* USTR대표 후보로 스티븐 본(Stephen Vaughn),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제프리 게리시(Jeffery Gerrish), C.J. 마호니(C.J. Mahoney), 데니스 셰이(Dennis Clark Shea) 등이 거론(Politico,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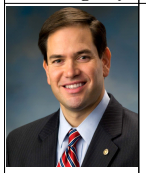
2)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전 내각의 모든 42명의 구성원 대상 트럼프의 대선 출마 지지 조사 (20명 지지, 22명 반대 응답). 많은 트럼프 전 행정부 각료들은 트럼프의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난입과 같은 사건들에 실망감을 표명하며 재선에 반대 입장 표명 (2024.8)

2. 주요 인선 전망

<트럼프 차기 정부 주요 인선 후보 약력>

직책		이름	인사 정보
백악관	비서실장	 Russell Vought	학력: 조지 워싱턴대 법학 박사/경력: 트럼프 1기 예산관리국 국장 낙태와 이민 정책에 반대하며, 기독교적 가치 강조, Project 2025의 주요 설계자로서 보수적 정책의 확대와 연방정부 재편성을 목표로 하는 계획 주도
	안보보좌관	 Robert O'Brien	학력: 버클리대 법학 박사/ 경력: 트럼프 1기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통적인 외교 정책 보수주의자로 對중국 강경 정책과 중동 평화 협정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 수행
		 John Ratcliffe	학력: 서던 메소디스트대 법학 박사/경력: 트럼프 1기 국가정보국장 현 American Global Strategies 고문, 텍사스 하원 의원 역임,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로 對중국 정책과 이민 정책에 강경 입장 및 '16년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조사에 비판적 입장 표명
	경제보좌관	 Robert Lighthizer	학력: 조지타운 법학 박사/경력: 트럼프 1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트럼프 1기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전 트럼프 행정부'미국 우선'정책의 핵심인 무역 거래 협상과 무역 정책 집행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트럼프 무역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며 관세와 무역 불균형에 대한 강경 입장 고수, 상무부 장관으로도 거론
	정책보좌관	 Stephen Miller	학력: 듀크대 학사/경력: 트럼프 1기 백악관 정책 보좌관 강경한 반이민 성향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여행 금지령, 난민 수용 축소, 가족 분리 정책 등을 주도, 중국 유학생의 미국 입국 금지, 엄격한 이민 정책 및 국경 통제 조치 시행 계획 제시

<계속>

직책	이름	인사 정보
국무부 장관	 Bill Hagerty	학력: 밴더빌트 로스쿨 법학 박사/경력: 현 테네시 상원의원 2016년 트럼프 행정부 인수팀 인선 책임자 역임, 트럼프와 밀접한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며, 경제·안보 문제 관련 강경 보수 입장 지지, 상원에서 미 국가안보 및 경제정책 관련 주요 법안에 영향력 행사, 상무부 장관으로도 거론
	 Marco Rubio	학력: 마이애미 로스쿨 법학 박사/경력: 플로리다 상원의원 쿠바계 미국인으로 플로리다 하원 의장 역임, 2010년 상원의원 당선,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국가 안보 및 남아메리카 정책전문가로 중국 및 이란에 대해 강경 입장 고수
재무부 장관	 Steven Mnuchin	학력: 예일대 경제학 학사/경력: 트럼프 1기 미 재무부 장관 골드만삭스 출신의 경제 경영 전문가, 2016년 미 대선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페인의 재무 책임자로 활동, 트럼프 1기 행정부 제47대 재무장관 역임. 트럼프 감세 및 2017 세제 개혁 지지,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 주장
	 Scott Bessent	학력: 예일대 학사/경력: 투자자, 헤지펀드 매니저 Key Square Group의 설립자이며 헤지펀드 매니저로,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에 대한 전문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24 대선 트럼프 캠페인 핵심 경제고문으로 활동하며 트럼프의 경제정책 옹호
상무부 장관	 Linda McMahon	학력 : 이스트 캐롤라이나대 학사/트럼프 1기 중소기업청장 역임 트럼프 재선 캠프의 슈퍼 PAC인 America First Action의 의장 및 트럼프 대통령 인수팀 공동 책임자로 보수적 입장 표명, 트럼프 전 행정부 중소기업청장 역임 당시 세제 개혁, 규제 완화, 소외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
	 Ray Washburne	학력: 남감리교대 학사/경력: 트럼프 1기 대통령 직속 정보자문위 위원 역임 트럼프 전 행정부 대통령 직속 정보자문위원회 위원 (2019~20), 해외민간투자공사(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CEO 역임, OPIC를 USAID, 국무부, OPIC의 법인 합병으로 대체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설립하기 위한 노력 주도

<계속>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직책	이름	인사 정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	 Stephen Vaughn	학력: 예일대 법학 박사/경력: 트럼프 1기 행정부 USTR 고문 현 Kings & Spalding 로펌 파트너로 전 트럼프 행정부 당시 USTR 법률 고문 역임, US Steel Corp. 이익 옹호 무역 소송 등 여러 무역 협상에 라이트하이저와 함께 참여, 무역 적자 감소를 위한 '관세' 충분히 고려 가능함을 언급
	 Jamieson Greer	학력: 버지니아대 법학 박사/경력: 트럼프 1기 USTR 수석보좌관 현 Kings & Spalding 로펌 국제무역팀 파트너, 트럼프 전 행정부 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수석보좌관 역임, 중국 무역 협정 1단계 및 USMCA 개정 논의 참여

[자료: 인사 홈페이지, Axios House, CNN 등 현지 언론 종합]

2 경제정책 전망

1. 트럼프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방향

▶ 경제 회복, 물가 안정, 美 우선주의 제조업 강화, 자국 산업 역량 강화 및 활성화
▶ 개인·기업 감세와 규제 완화, 물가 억제 추구, 금리 정상화 등 추진
▶ 미국 내 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및 자립 촉진

□ 경제 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추구

○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규제 완화, 에너지 독립 등의 정책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통상·산업 정책 확대 전망

【 공화당 정강정책: "미국 우선(America First)으로의 복귀" 】

- 인플레이션 대응(챕터1): ①미국 에너지 해방(에너지 생산 규제 제거, 친환경 정책 종료), ②연방 예산 절약, ③불필요한 규제 제거, ④불법 이민 정지 등
- 경제정책(챕터3): ①규제 완화, ②감세/팁 면세, ③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정, ④믿을 만하고 풍부한 저가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⑤혁신(암호화폐, AI, 우주개발)
- 통상정책(챕터5): ①무역수지, ②디커플링(MFN 종료), ③미국 자동차산업 구제, ④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 ⑤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 ⑥제조업 강화

* 주: 총 16페이지 분량으로 경제, 이민법, 교육 등 10개 분야별 20개 원칙 포함
* 자료: 2024 공화당 정강정책(America First, A Return to Common Sense, '24.7.8.)

○ **(세제) 대규모 감세, 세금 공제 확대 및 규제 완화로 소비와 경제 성장 촉진**

- 트럼프 후보는 법인세 인하(현행 21%→ 15%) 등의 감세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며 개인 및 기업 대상 대규모 감세 공약 연이어 발표, "소득세 폐지하고 관세로 대체" 계획 확인('24.10.25.)

* CBNC('24.10.22.)가 추정치 분석 결과 트럼프의 세금 개혁 아이디어** 현실화 시 9,320만 여명(美 유권자의 약 38%)이 면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일부 소득세(서비스직 팁(tip), 사회보장 혜택, 초과근무 수당 관련) 폐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재향군인 세금면제 등

- (세제개혁법 연장) 트럼프는 재임시 지난 임기 중 단행한 감세 정책인 2017 세제 개혁법(TCJA)을 10년 연장하겠다고 언급

☞ **[트럼프 1기 정부 조치] 2017 트럼프 세제개혁법(TCJA, -2025)**

* Tax Cuts and Jobs Act of 2017: 1986년 이후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율(기존 35→20%), 개인소득세 구간을 조정해(최고세율 기존 39.5→37%) 대부분 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 제공

법인세율	▶ '18.1.1일부로 대폭 인하해 기업투자 장려(기존 35%→ 20%) ▶ 법인세 최저한세(AMT) 규정 폐지
개인 소득세	▶ 소득세 구간 축소(7→ 3단계), 최고 세율 인하(기존 39.5→ 37%)
비즈니스	▶ 보너스 감가상각(자본 투자 즉시 공제)→ '26년 종료시 단계적 폐지
상속세	▶ '24년 현재 상속세/증여세 면제 한도 1,360만 달러 * 만료시 한도는 '17년 이전 수준인 500만 달러로 복귀
지방세	▶ 주·지방세(State and Local Tax) 연방공제(10,000달러까지 허용)

- 이 외에도 트럼프 후보는 '24년 유세 중 △팁(Tip) 및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폐지('24.9.),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소득 이중 과세 폐지('24.10.10., WSJ), △미국 내 생산 자동차 대출 이자 상환액 세금 공제 추진('24.10.22.) 등 언급

- 기타 세제 규제 완화 및 IRS 행정 절차 간소화로 기업과 개인의 세금 보고 부담 경감, 중소기업 대상 세제 규제 완화 등

○ **(재정·통화)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정상화, 정부 예산 삭감, 가상화폐 산업 육성**

- (금리) 트럼프는 파월 現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연준) 의장의 금리 정책에 불만을 표해 왔으며, 재임시 연준의 독립성 약화* 및 금리 결정 개입 가능성 언급

☞ **[트럼프 1기 정부 조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와 양적 완화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연준에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실제 연준은 2019년 세 차례 금리 인하 단행

- (정부 예산) 불필요한 연방정부 예산 삭감을 통한 정부 재정 효율성 제고

*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제안에 따라 정부 효율성위원회(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 창설, 연방정부 재정 및 성과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과감한 개혁 권고

- (가상화폐)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가상화폐 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 공약

○ **(에너지) 미국 내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자립 촉진, IRA 보조금 삭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축소·철회 언급**

- (전통에너지) 미국 내 에너지 생산 촉진 및 민간에너지 혁신, 전통적 화석연료 산업 확대, 에너지 규제 완화·철폐* 등을 통한 에너지 가격 안정화, 전력 공급 단가 인하로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 달성 목표

* △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생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생산 장려,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시추 허가 완화 및 승인 절차 간소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

☞ **[트럼프 1기 정부 조치]** 각종 행정명령·법 개정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 환경 규제 완화, △키스톤 XL 송유관 공사 재개('17.1.24.), △온실가스 감축 규정 검토 지시('17.3.)

- (원전) 원자력위원회 현대화, 기존 발전소 재가동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 혁신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투자로 전력 수급 확대 등 생산·발전 지원

- (친환경) 기존의 **친환경 정책* 철회**,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ESG 정책 중단을 통한 미국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 확보

* 그린뉴딜, 전기차 의무화 및 자동차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등

☞ **[트럼프 1기 정부 조치]**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2017-2021) 중 공식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한 환경 규칙은 70개 이상(하버드 경제연구소, '20.10.)

- (IRA)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보조금 삭감, IRA 폐지 등 언급

○ **(제조업) 제조업 부흥, 기술 혁신 장려 및 자국 산업 기반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

- 미국산 우선구매(Buy American) 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기반 확대, 제조업 수요 증대, 외국산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 축소

- 외국 수입품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로 미국 내 공급망 강화, 저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기업의 제조 공장 미국 내 이전·설립 장려로 일자리 창출, 미국 내 경제 활동 촉진 및 국내 제조업 강화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 현지 반응 및 전망

□ **트럼프 1기 경제정책의 성과를 기대하는 한편 불안정 요인도 상존**

○ 트럼프 1기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강력한 경제, 일자리 창출, 낮은 실업률, 감세·규제 완화 효과 등 주목할 만한 성과 달성(Investopedia, 2024.8.)

- 다만, 보호주의 무역 정책과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 리스크, 환경 문제, 국제 관계의 불안정성 등이 혼재

□ **인플레이션 및 정부 재정 적자 증대로 미국 경제 성장에 부정적 전망**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24.9.) 트럼프 경제공약이 시행되면 기존 2026년 1.9%로 예상되었던 인플레이션이 6~9.3%까지 급등할 전망

○ (Penn-Warton, '24.8.) 트럼프 세금 감면 및 지출 공약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5조 8천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신규 수입세 및 관세는 다른 정부의 잠재적인 보복 조치 및 기타 경제적 역학으로 인한 수익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 언급

○ (JP모건/골드만삭스, '24) 트럼프의 강경한 무역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동시에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큼

3 통상정책 전망

1. 트럼프 차기 정부 통상정책 방향

▶ 미국 보호무역 확대 및 고율관세 부과
▶ 중국과의 디커플링 강화 및 對중국 무역·투자 제재 강화
▶ 미국 내 제조업과 핵심 산업 공급망의 안정성 강화
▶ 국력 우위에 기반한 양자 무역협상 및 다자 무역협정 재검토

□ (관세) 무역 불균형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무역 확대

○ 트럼프 상호무역법*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 추진, 모든 수입품에 10~20%p 보편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60% 추가 관세 부과 추진 가능성

*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상대국이 미국 수출품에 관세 부과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따르는 정책

○ 무역흑자국, 환율 조작국에 징벌적 관세 및 특정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협상 불발 시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한 관세 정책>

관세 정책	설명	대상 범위	목표 대상
무역법 301조 관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약 2,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	중국 수입품
무역법 232조 관세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전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
세이프가드 관세	미국 제조업 보호를 위해 태양광 패널에 30%, 대형 세탁기에 최대 50% 관세 부과	태양광 패널 및 세탁기 수입품	중국, 한국산 제품

[자료: 현지 언론 종합]

□ (중국) 對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제재 강화

○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의 수입을 4년 내 단계적으로 축소

○ (무역)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철회하여 고관세 및 수출통제 조치 등 부과

* 미국이 특정 국가에게 최혜국 대우 관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하는 지위, 중국은 '00년에 획득

○ (투자)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를 통해 중국발 투자 금지 및 對中 투자를 감독

- 에너지, 기술, 통신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 소유 제한 및 자산 강제 매각

○ (우회 수출) 트럼프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멕시코 등에서 제조된 중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해 고관세(100~1,000%)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

- (USMCA 재협상 검토) '26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 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멕시코 우회 수입 방지 조치 반영 전망

* 트럼프 후보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멕시코 생산을 통해 현행 USMCA의 무관세 혜택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제기

□ (공급망) 미국 내 제조업 및 핵심 산업의 공급망 강화

○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와 같은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내로 재배치하여 국가안보와 경제적 안정성 보장

○ 미국 내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무역협정) 양자 무역 협상 선호 및 다자 무역협정 재검토

○ 엄격한 무역협정 집행으로 무역 파트너국들의 규제 위반 시 관세 등 강력 대응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및 국가 간 무역협정 재협상 시사

*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간 경제협력 체계

** 유럽연합과 미국 간의 무역과 기술 협력 강화 및 공통의 규범과 표준 마련

☞ **[트럼프 1기 정부 조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USMCA로 교체, 한미 FTA를 개정하는 등 양자 협정 선호

2. 현지 반응 및 전망

□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및 공급망 재편 전망

○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24.6.) 미국과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들이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더욱 강화하며, 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해 우호국들과의 공급망을 재편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

○ (브루킹스 연구소, '24.4.)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 감시를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및 군사적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 제한을 더욱 강화할 전망

□ 트럼프 측근들도 관세 부과에 대한 예측이 분분

○ (트럼프 경제고문 스콧 베센,'24.10.) 관세는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앞서 외국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도록 기회를 줄 것

○ (前 USTR 대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24.10.) 트럼프 관세는 미국 무역적자 종식을 추구하며, 외국의 양보가 있더라도 영구 유지될 것

○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 에버렛 아이젠스타트, '24.10.) 트럼프 정부는 먼저 중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순차적인 협상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 전략을 사용할 전망

□ 현지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 중

○ 카토(Cato) 연구소('24.9.), 보고서[3]를 통해 1930년대 이후 미국 의회는 적절한 절차 규정과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각종 입법을 통해 관세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권을 인정했다고 분석

3) https://www.cato.org/commentary/grading-trumps-economic-policies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편관세 및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정책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기반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232조*, 301조**, 국제비상경제수권법(IEEPA)*** 등을 활용,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 보유

-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수입 규제 조치 행사 가능
- 외국의 부당한 무역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 조정 명령 가능
- 국제 경제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광범위한 대외 경제 활동 규제 가능

○ 반면, 앨런 울프 전 WTO 부 사무총장은 의회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대통령의 관세 권한은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24.9.)

* 어떤 현행 법률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률적 보편 기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며, 국가 비상 선포를 위해서 특정국을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판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전 세계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법률에 위배

○ 한편, '24년 6월 대법원의 셰브런 독트린 파기 결정*에 따라 트럼프 관세는 최종 법원 판결을 통해 무효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존재

* (Chevron Doctrine) 법률 문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행정부의 법률 해석과 이행 지침 수립을 폭넓게 존중하는 관례. 대법원의 셰브런 독트린 파기로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법률의 취지를 직접 판단하게 됨

참고 < 이전 바이든 행정부와의 주요 경제·통상정책 비교>

정책 요소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신행정부
미중관계	• 디리스킹(De-Risking) • 전략적 표적 관세 • 對중국 전략 품목 301조 관세 부과 • 수출통제 강화(첨단산업) • 강제 노동 제품 수입 금지제재 확대	• 디커플링(De-Coupling) •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 핵심 품목의 단계적 수입 중단 및 수출통제 범위 확대
무역 통상	• 다자간 무역 협상 • 노동·기후 규범 강화 • USMCA 및 IPEF를 통한 무역 협력 확대	• 양자 간 무역 협상 •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 기존 무역 재협상 검토 • 무역수지 상호주의 원칙 • 불공정 무역협정 철회
공급망	• 프렌드쇼어링, 니어쇼어링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 동맹국 및 파트너 역할 강화	• 리쇼어링 및 온쇼어링 강화 •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축소
기후변화	• 기후변화 대응 적극 추진 • 친환경 에너지 투자 확대 • IRA 통한 청정에너지 기술 발전 • GSSA 협정 추진	• 화석연료 산업 부흥 • 원자력 발전 확대 • 파리 기후협정 재탈퇴 • 그린뉴딜 중단
제조업	• Buy American 정책 유지 • IRA와 CHIPS 법을 통한 제조업 육성 • 전기차·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지원	• 미국 제조업 강화에 초점 • Buy American 정책 확대 • IRA 기후 관련 지원금 축소 • CHIPS법 보조금 축소, 폐지
세제	• 중산층 감세 • 법인세 인상, 고소득층 세금 인상 •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재정 지출 확대	• 개인 및 기업 대상 대규모 감세 • 화석 에너지 재정 지출 확대
사회안정망	• 의료 확장 및 교육 지원 확대 • 아동 세액 공제와 주택 보조 강화	• 메디케어 및 사회보장 제도 보호

[자료: 양당 정강 정책, 현지 언론 종합]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Ⅲ 우리 무역·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망

1 정책 방향 요약

1 (경제) 공급망 내재화를 통한 미국 내 산업 역량 강화

❶ 감세를 통한 경제 회복

– 대규모 감세와 세액 공제로 경제 성장 촉진,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

<트럼프 주요 감세 공약 요약>

종류	내용
법인세	미국 내 생산·미국인 고용 기업 대상 최고세율 15%로 인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37% 영구화, 39.6%까지 추진
상속·증여세	'17년 이전 수준인 500만 달러로 복귀('24년 현재 1,360만 달러)
급여세	팁·초과 근무 수당 대상 폐지

– 제조업 고도화를 위해 미국 내 기반을 둔 제조업체 대상 R&D 세액 공제 강화 공약

* 트럼프는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첫 해에 중장비 및 기타 장비 비용 100% 상각할 수 있도록 R&D 세액공제 확대하겠다" 발표('24.9.)

❷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촉진 및 생산활동 활성화

– 화석에너지 개발 및 생산 독려, 배출가스 기준 및 노동 규제 완화 추진

– AI를 주요 전략산업으로 보고 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최소화 주장

❸ 자국산 우선 정책 유지로 공급망 해외 의존도 축소

–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n) 정책으로 연방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사업 내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

– 미국산 자동차 구입시 대출 이자 전액 세금 공제를 공약

– 행정명령 13944호*를 복원해 연방 기관의 미국산 구매 의무화 추진, 필수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보장 및 촉진

* 필수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20.8. 발표)

– 생물보안법으로 바이오 공급망 내 중국 의존도 감축 현실화

2 (통상)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

❶ 관세 기반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자국 산업 육성 추진

– 전방위적인 관세 도입으로 저가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관세를 통해 해외 첨단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 설립을 유도

<트럼프 관세 공약 요약>

대상	종류	내용
모든(All) 국가	보편관세	모든 수입품 대상 10-20% 추가 관세
	상호관세	미국산 제품에 대해 외국이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당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특정(Specific) 국가	고율관세	중국산 수입품 대상 60% 추가 관세
	징벌적 관세	무역흑자국, 환율 조작국 대상 부과되는 관세

❷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견조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 시사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USMCA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및 국가 간 무역협정 재협상 시사

❸ 바이든 정부의 對中 무역·투자 양방향 제재 기본 방향은 유지 전망

–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통한 경제·산업 자립도 강화, 국가안보 수호

구분		제목	내용
무역		PNTR 지위 철회	중국의 PNTR 지위(미국으로부터 최혜국 대우 관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음)를 취소해 對中 고율 관세 및 수출통제 조치 부과 가능
		관세	수입품 대상 고율관세(60%)
			멕시코 등을 통해 우회되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대상 1,000%까지 관세 부과 시사
투자	美 → 中	행정명령 14105호	우려국(중국, 홍콩, 마카오) 내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관련 기술 분야 對中 투자를 희망하는 미국 기업은 사전에 미 재무부에 투자 계획 신고 필요
	中 → 美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FIRRMA)	미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중국) 투자거래에 대한 심사 강화
		외국기업 책임법 (HFCAA)	미 증시 상장 중국 기업 대상 미 회계감독위원회의 회계 감사 강화

2 우리 무역 · 투자에의 영향

1 기회요인

□ 첨단산업, 전력 기자재, 원전(SMR 등) 기자재, 화석연료 인프라 등

❶ (제조업) 미국 우선주의 제조업 육성책으로 첨단산업 투자 및 인프라 증설 전망

○ **반도체**: 미국 내 첨단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R&D 지원으로 시장 기회 확대

* (반도체 진출기업 A사 임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이미 미국에 진출한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 기업들은 제조시설 건축 속도가 빨라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 **기계·장비**: 인프라 개발 및 리쇼어링 정책 강화에 따른 수요 증가

* '24.1-9월 대미수출(MTI3): 기타 기계류 117.7%↑, 반도체제조용장비 52.3%↑, 금속공작기계 11.3% ↑

○ **화석연료 인프라:** 원유 시추용 플랜트, 부품, 원자재 등 수요 증가

* 트럼프, 신규 LNG 수출사업 허가 보류 중지, 멕시코만/알래스카북부 시추 추가 허용 등 공약

❷ (AI 활황) 최근 데이터센터 급증세에 따른 인프라 수요 확대 예상

* 美 10대 전력기업 중 9개가 최근 전력수요 급증의 요인으로 데이터센터를 지목(Reuter, '24.4.)
* 전세계 데이터센터 8천곳 중 1/3이 미국 내 위치, 4대 빅테크(아마존, MS, 구글, 메타) 등 확장세

○ **원자력:** 원전(SMR 등) 개발 관련 시설, 기자재 수요 증가

* 최근 인프라 증가 및 AI 전력 수요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미국 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관련 수요 증가 전망
* 트럼프는 미시간주 포터빌 연설에서 "신속한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취임 첫 날부터 새로운 시추, 파이프라인, 정유소, 발전소, 원자로를 승인할 것"이라 언급하며 SMR 투자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음('24.8.)

○ **전력 인프라:** 변압기 관련 부품 등 전력 인프라 관련 기자재 수요 증가

– 미국 전력 노후 설비 교체 수요 급증, 리쇼어링에 따른 제조업 공장 신설, AI 붐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 증가로 관련 인프라 수요 증가

*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등 전력기기 3사가 '23년 역대급 실적 갱신
* (기계·장비 Y사 바이어) "미국 정부의 공급망 정책과 對中 견제 기조로 한국 기업이 품질 및 가격 면에서 상대적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

* 미국 송전 전력망 50% 이상은(대형 변압기 포함) 설치 40년을 경과해 교체 주기, (통상 수명 30~60년)를 초과한 상태, 70%는 설치 25년 경과
* 대한전선, '24년 미국서 5,200억원 수주(노후 전력망 교체 프로젝트)...누적 수주 사상 최대 달성
* 미국 내 변압기 수요 대비 공급 부족 현상으로 경쟁력 높은 한국 변압기 제품에 대한 바이어 문의가 늘고 있음(KOTRA 달라스 무역관 A지사화 기업)
* '23년 한국산 변압기(HS 8504.21) 수입규모는 전년비 461.9% 증가한 2.2억 달러로 미국 수입 2위

□ 대체시장: 자동차, 첨단산업 소부장(반도체), 바이오 등

* (중국산 대체효과) 트럼프 1기에 시행된 對中 301조 관세 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하락, 멕시코, 캐나다, 대만,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중국 대체 국가의 수출 증가

○ 301조 대상 품목군에서 2023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2017년 대비 65.2% 증가했으며, 미국 시장 내 점유율도 동반 상승(3.2%→ 4.6%)

* 한국의 대미 301조 수출액의 90%를 차지하는 7개 품목군 전체 수출 급증('17-'23): 기계전자(56.7%), 화학(242.8%), 운송 기계(69%), 금속(44.9%0 등 (중국은 급감) (USITC)

ㅇ **자동차**: 고율 관세에 따른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하락과 공급 감소

* (자동차 진출기업 B사 재무 관리자)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중국산 부품 대신 한국산 부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ㅇ **바이오**: 생물보안법 등에 따른 중국 기업의 미국 바이오 시장 내 입지 축소 전망

* (D 변호사) "미국 바이오제약사의 26%가 중국 파트너와 협력 중단을 고려중,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한국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② 리스크 요인

□ 트럼프 정부는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출 확대에 진입 장벽을 강화할 전망

○ 특히 對중국 제재는 한-중 간 공정 연계 상 중국산 부품 및 원자재 대상 규제 강화 시 우리나라에도 직·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반도체 진출기업 A사 임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경우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 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 트럼프가 對中 견제 조치의 일환으로 우회 수출 규제 시 멕시코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는 "취임 즉시 USMCA를 대폭 개정해 멕시코산 자동차에 1,00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며 USMCA 개정을 통한 멕시코, 캐나다 내 對中 우회 수출 차단 시사('24.10.)

○ 트럼프의 이민 축소 정책에 따라 주재원 파견 또는 현지 이민자 채용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태양광 진출기업 H사 담당자) "트럼프 후보 당선 시 이민 축소 정책으로 인해 비자 발급 지연 또는 거부 사례가 증가할 수 있어 한국에서의 인력 파견과 현지 이민자 채용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장 기회가 높아지는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이 필수

○ 미국은 미래 첨단기술인 AI, 바이오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음

- AI: '23년 미국 정부·민간 투자액이 총 874억1,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AI 투자액(1,419억 달러)의 62%를 차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4.7.)
- 바이오: 미국의 '25년 정부 총 지출안 내 보건복지부의 R&D 예산(514억 달러)을 전년(476억 달러)대비 7.9% 증가시켜 타 부처대비 가장 높게 증액(한국제약바이오협회, '24.6.)

□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시장 내 인지도를 굳혀가는 K-beauty, K-Food 등 우리 소비재 제품이 가격 인상 타격을 받을 수 있음

○ 시장 내 입지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프리미엄'제품으로 차별화 모색

[참고자료]

The Republican National Committee, 2024 GOP Platform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Election 2024, Aug. 2024
Mintz. Pre-Election Analysis: International Trade, Sep. 9. 2024
T.Rowe Price. U.S. election and trade policy, What investors need to know, Aug. 2024
WSJ, A Second Trump Presidency Stands to Radically Remake World Trade, Oct 16. 2024.
Inside Trade, Greg Ip. A Second Trump Presidency Stands to Radically Remake World Trade, Oct 16. 2024.
AP, Trump's plans if he returns to the White House include deportation raids, tariffs and mass firings, Nov 12. 2023.
CNN, Promises Donald Trump has made so far in his campaign for a second term, Oct 11. 2024.
The Diplomat, Asia on Edge: What MAGA Think Tanks Reveal About a Trump 2.0 Presidency, June 13. 2024.
VOA. How Harris and Trump diff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 July 30. 2024.
Chatham House, What a second Trump presidency would mean for the world, Sep. 12. 2024.
CSIS, Making Tariffs Great Again: Does President Trump Have Legal Authority to Implement New Tariffs on U.S. Trading Partners and China?, October 10. 2024.
CSIS, The Transatlantic Trade and Climate Space after the U.S. 2024 Elections, Oct. 21. 2024.
CAP20, A New Horizon in U.S. Trade Policy, March 14. 2023.
PolitiFact, Donald Trump's 2024 campaign promises: Here's his vision for a second term, Sep. 30. 2024.
Politico, Who might make up Trump's Cabinet, Oct 19,2024
Tax Foundation, Donald Trump Tax Plan Ideas: Details and Analysis, Oct 14, 2024
Albright Stonebridge Group, Possible Cabinet Members of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ug. 6. 2024
WSJ, Who Is in Donald Trump's Inner Circle? These Are His Closest Advisers, July 16, 2024
Donald J Trump campaign website, Agenda 47, 2024
Lowy Institute, Trump 2.0 What Donald Trump's return would mean for Australia and the world, Aug, 2024
FSG Group, Trump 2.0 What might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look like? 2024
Bloomberg, Forecasting America's Economic Future Under Harris vs. Trump, Oct 9, 2024
The Hill, Trump Cabinet 2.0: Who's in the running for top spots, Sep. 22, 2024
Penn Wharton, The 2024 Trump Campaign Policy Proposals: Budgetary,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Aug 24, 2024
PIIE, The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a Second Trump Presidency, Sep. 2024
WP, Trump takes a scattershot approach to income-tax reform, Aug. 18, 2024
Investopedia, The Economic Impact of Donald Trump's Presidency, Aug. 5, 2024
WP, Harris vs. Trump on the economy: Comparing their policies, Sep. 4, 2024
Moody's, Assessing the Macroeconomic Consequences of Harris vs. Trump, Aug. 2024
CATO Institute, Grading Trump's Economic Policies, Oct. 18, 2024
WP, Trump's presidential bid has the support of only half of his Cabinet, Aug. 2024
Kleinman Center for Energy Policy, Comparing the 2024 Presidential Candidates' Energy Agendas, Aug.8, 2024
Harvard University Center for the Environ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eversing Nearly 100 Environmental Rules, Oct.15, 20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June. 28. 202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PBMA FOCUS 제15호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 June. 14. 2024

작 성 자

- 워싱턴 무역관 문현주, 정수나
- 뉴욕무역관 김범수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김서원
- 실리콘밸리 무역관 최세영
- 달라스 무역관 신지혜, 이재인
- 애틀란타 무역관 김회승
- 디트로이트 무역관 박민정, 송소영
- 구미CIS팀 심솔리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4-056

발 행 일	2024년 11월
발 행 인	유정열
발 행 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13
전 화	1600-7119
홈 페 이 지	www.kotra.or.kr

• ISBN: 979-11-402-1072-5 (9532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